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발 간 사

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가로막는 규제합리화 사례를 모은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우수 사례를 기록하고 공유하여 경기도민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기업의 애로사항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보다 규제합리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여러 가지 낡은 규제 때문에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진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하나하나의 별다른 영향을 못 끼칠지 몰라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아 고스란히 도민과 국민께 불편과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다른 이들을 약탈하는 현상은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언제나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경기도지사 이 재 명

Contents

공공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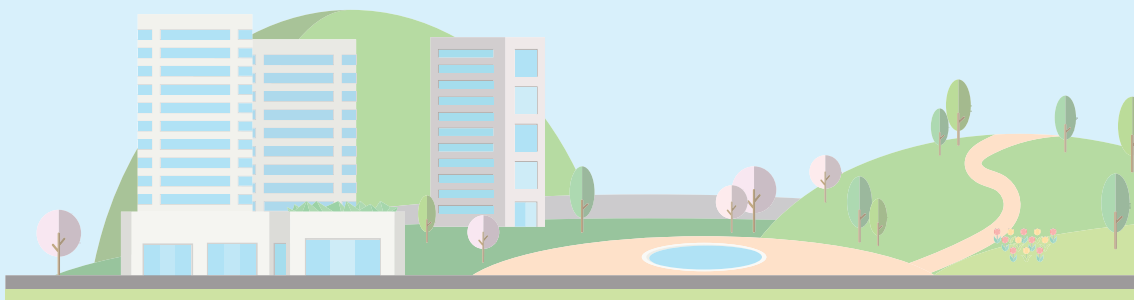
- 01.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 8
- 02.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정 범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도모 10
-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 11
- 04.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불합리한 하수도원인 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12
- 05. 불필요한 민원서류 다이어트로 도민불편 해소 14

산업, 중소기업

- 01. 위기를 넘어 상생의 뜻을 올린 스타필드 안성 20
- 02.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22
- 03. 기업애로, 달려가는 현장소통으로 해소! 24
- 04.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27

보건·사회복지

- 01.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32
- 02. 미용업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1/3이상 투명하게 설치 조항 삭제 37
- 03. 시민과 함께 넘비를 핏피로 41



국토·지역개발

01. 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46
02.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49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51
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허용	54
0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가능!.....	57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9
07. 고덕지구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실	62
08.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65

신산업

01. 부천시 제조기업 IoT의 날개를 달다!	70
0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입지규제 완화.....	74
03.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78
04. 자율주행시 실험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립니다!	80
05. 생명 살리는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	84
06.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 13조 시장 진입	87
07.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솔루션 공급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 진입	91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공공행정



1 PART

- 01.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08
- 02.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정 범위 확대를 통한10
소상공인 보호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도모
-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11
- 04.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불합리한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05. 불필요한 민원서류 다이어트로 도민불편 해소14

01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조항 규제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031-345-2252

개선배경



-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도시개발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
 - 학교시설 설치에 교육청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학교 설치와 개발 사업이 지연됨
- ※ **관련규정**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개선내용



개선전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학교시설 기부채납 불가



개선후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및 학교시설 확충

- 의왕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면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변경('18.1)

개선효과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
※ 2018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152개(국토교통 통계기준)
- 부담금의 부과부터 징수 및 면제 업무를 일원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완공 기간을 단축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
※ 5,65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2018년 경기도 사업을 의왕시 규모로 추정)



02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정 범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도모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개선배경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문형 이용 광고물은 유리벽의 안쪽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의 용이성 등으로 유리벽 바깥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 규정위반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20조(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개선내용



- 유리벽이 바깥쪽에 붙이는 광고물을 벽면이용광고물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개선전

- 유리벽 안고 밖의 광고물 기준이 복잡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법설치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개선후

- 유리벽 외벽 부착광고물 설치개수 완화하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 마련

개선효과



- 전국 상가건물(약 3만개소) 유리벽 외벽 합법 광고 가능
 -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 마련 및 통보('20년 상반기)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개선배경



- 현재 임대사업자는 2개의 행정기관(지자체/세무서)에 각각 말소 신청해야 하므로 한 곳에만 말소한 경우 등록면허세(1만~4만원)를 부과 받아 민원 지속 발생
 - 해당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소득세법)를 받아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개선내용



- 임대사업자 말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등 마련
 -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으나, 말소시에서 미반영

개선전

- 임대사업자 말소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청



개선후

-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하여 세무서로 이송·처리하도록 시스템 마련
- 국세청과 협의하여 온라인(렌트홈*)에서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20년)

※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 렌트홈(www.renthome.go.kr)

개선효과



- 전국 임대사업자(41만명) 말소시 행정편의 제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년 까지) 및 국세청과의 협의 후 시스템(렌트홈) 개선

04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불합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개선배경



- 노천형 난립 중고차매매상사가 빌딩형 복합매매단지로 조성되는 추세,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부담금 부과 방식 유지
- 단순 주차기능으로 오수발생이 없는 자동차 전시공간을 부과면적에 포함
 - 부담금 산정 : 기준 오수발생량(15ℓ) × 단위단가(원/톤) × 연면적(㎡)(연면적 70%이상)
- 불합리한 산정 방식에 따른 부과금 과다 부과로 기업 피해 발생
 - 실제 상수사용량보다 환경부 기준 오수발생량 최대 67배 많이 발생

개선내용



- 자동차매매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개선
 ※ 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 개정(11.25일)

개선전

➤ 빌딩형 자동차매매단지의 자동차 전시공간은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면적에 포함하여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



개선후

➤ 전시공간을 오수량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개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2019. 7.18 :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규제 접수
- 2019. 8.12 : 도 주관, 관계기관 합동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실시
 - 관계부서(규제개혁담당관, 상하수과) 현지실사, 규제개선 방안 논의
- 2019. 8.12 : 기 운영중인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운영실태 현장 조사
 - 전시공간, 근생시설 등 시설조사, 용인시 부담금 면제사례 및 개선방안 검토
- 2019. 8.28 :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방문 설명 및 환경부 고시 개정 건의
- 2019.10. 8 : 환경부(생활하수과) 방문 및 고시개정 건의
- 2019.10.17 : 환경부 '오수량 산정기준 자문회의' 전문가 개선 필요성 설명

- 2019.10.25 :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추가 피해기업 현장 조사
- 2019.11. 5 : 환경부 의견조치에 따른, 道 소관부서(상하수과) 방문 협의
- 2019.11.25 : 환경부 고시 개정

개선효과



- 불합리한 기업부담 해소 및 자동차매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건물 내 주차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전시공간(부담금 산정시 포함)



피해기업 현지조사 및 규제개선 간담회



05

불필요한 민원서류 다이어트로 도민불편 해소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25

개선배경



-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규제개혁 추진
- 인·허가, 입찰·계약, 신청 등 민원사무 처리에 불필요한 서류를 발굴하여 감축 또는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도민 불편 해소
 - 관행적 서류 요구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산망 확인, 불편한 민원절차 개선 등

개선내용



- 자체감축 사례

① 경기도 입찰·계약

개선전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① 건설업등록증
- ②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③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④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⑤ 전기공사업등록증
- ⑥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⑦ 소방시설업등록증
- ⑧ 사회적기업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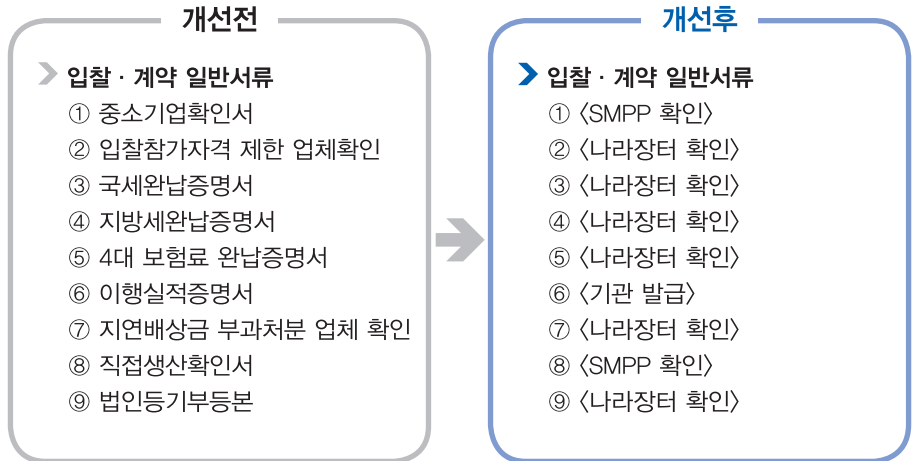
개선후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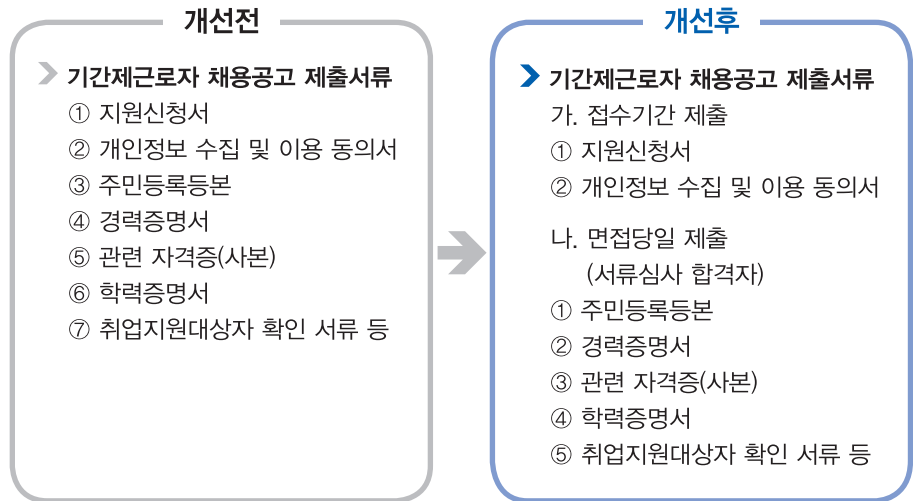
- 입찰참가자격 서류(8종)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전국 최초 행정안전부 승인)

② 경기도 공공기관 입찰·계약



-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망 등 전산망으로 입찰·계약 서류 확인
 ※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에 미해당

③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④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개선전

➤ 임·직원 채용 구비서류

- ① 인사기록카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④ 학력증명서
- ⑤ 성적증명서
- ⑥ 경력증명서
- ⑦ 이력서



개선후

➤ 임·직원 채용 구비서류

- ① 인사기록카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④ 학력증명서
- ⑤ <삭제>
- ⑥ 경력증명서
- ⑦ <삭제>

- 현실에 맞지 않는 서류 등 삭제

● 부처수용 사례

- 상위법령 개정(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신설, 절차 개정 등) 건의

①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복지부)

개선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①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영업양도 경우)
-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상속 경우)
- ③ 기타 서류(그 밖의 경우)



개선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①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영업양도 경우)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상속 경우)
- ③ 기타 서류(그 밖의 경우)

②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국토부)

개선전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 ①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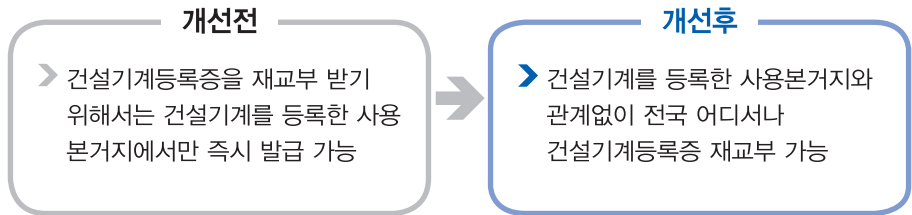


개선후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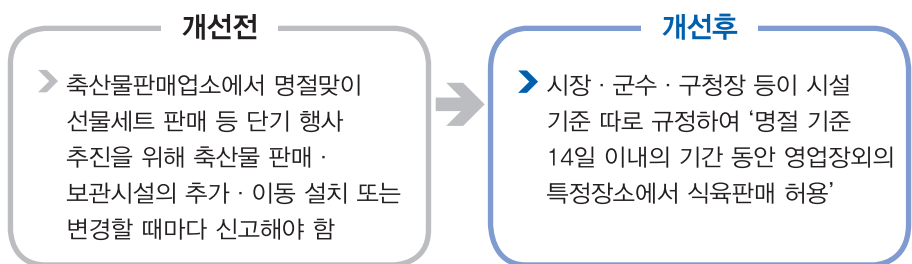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③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전국 발급 개선(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시행(2021.8.21.)

④ 축산물판매시설 한시적 운영 신고절차 완화(식약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9.7.29.~9.9.)



- 민원서류 준비와 절차에 소요되는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도민만족 도모
- 불필요한 민원서류 보관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기대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산업, 중소기업



2 PART

01. 위기를 넘어 상생의 뜻을 올린 스타필드 안성	20
02.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22
03. 기업애로, 달려가는 현장소통으로 해소	24
04.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27

01

위기를 넘어 상생의 뜻을 올린 스타필드 안성

규제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극복

 추진부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031-678-3848

개선배경



- 안성은 상수원규제,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로 개발가능지역이 거의 없어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움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반려, 유기사설인 어린이 테마파크 도시계획조례상 불가라는 난관에 부딪혔으나 관광객 유치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사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개선내용



개선전

- 교통영향평가 상 지자체간 갈등문제 표출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상 유기사설 설치 불가능



개선후

- 국도 38호선의 교통량 유입하는 직결램프 설치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사설 허용

- 지속적인 기관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국도 38호선의 교통량을 유입하는 직결램프* 도로연결허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방문 및 협의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통과
 - ※ 직결램프 : 고속도로 유출차량이 안성IC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협의 8회 ('17.09.12, '17.10.20, '17.11.03, '18.01.12, '18.02.02, '18.02.22, '18.04.09, '18.04.13)
- 국토교통부 협의 3회 ('17.10.23, '18.02.12, '18.03.05)
- 한국도로공사 협의 3회 ('17.09.22, '17.10.13, '18.03.05)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협의 4회 ('18.01.18, '18.02.14, '18.02.27, '18.04.12)
- 스타필드 하남 현장 회의 1회 ('18.03.28)
- 교통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1회 ('17.12.05)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의 입지 거리제한 조항 개정 ·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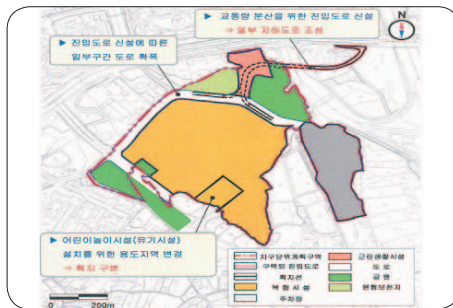
※ 주거지역 20미터 거리 밖에 허용 → (추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거리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 허용.

- '18.05.28. :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입안
- '18.05.29. : 스타필드 안성점 개발관련 업무협약
- '18.07.05. : 건축(변경)허가
- '18.07.19. : 도시관리계획(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18.08.07.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8.27. : 공사착공
- '18.10.23. :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원안가결)

기대효과



- 경기 남부권역 유통인프라 확충과 4천여 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 안성시 랜드마크 시설유치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방문객 예상
- 방문객 대상으로 안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02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산업단지내 공공편의시설 확충 및 업종변경 등 적극행정 추진

 추진부서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298

개선배경



-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공공편의시설(기업지원센터, 체육시설 등) 부족
 - 기존에 토지모양이 부정형하여 토지효율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장기 미분양 용지로 남아있는 부지를 향후 기업지원센터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청사부지 변경 및 매입 추진
 - 근로자를 위한 여가시설 설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약 17,000㎡의 저류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용지와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을 통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 업종배치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
 - 단일 업종으로 계획되었던 총 23필지를 기업체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 대중교통을 연계한 취약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환경 열악
 - 근로자를 위한 무료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개선내용



개선전

➤ 공공편의시설 없음



개선후

➤ 기업지원센터,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추진

- 경기도시공사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여 공공청사부지 매입 완료('19.3) 및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완료('19.4)

개선전

➤ 단일업종



개선후

➤ 복합업종 변경 (23필지)

- 양촌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8 - 5129호, '18.6)

개선전

➤ 대중교통 열악



개선후

➤ 통근버스 운영

-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대 4개 노선 운영 ('18.3 ~ 19.현재)

개선효과



-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은 물론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한 체육, 문화 등 여가시설 확보
- 단일 업종 입지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 다각화 및 무료 통근버스 운영으로 취약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환경 개선 기여



03

기업애로, 달려가는 현장소통으로 해소!

공장 설립승인부터 가동까지 적극행정으로 기업 소생

 추진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281

개선배경



- 경매로 공장을 인수한 기업이 공장 설립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전력수급 애로 발생
 - 진입로 확보 및 기존 허가사항 변경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2달에 걸쳐 진행
 -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경우 공장 가동이 불가하여 매출액 감소, 이자 발생, 고용인원 감축 등 기업 활동 피해 발생

개선내용



개선전

- 공장 설비 정상가동 및 제품생산 불가



개선후

- 공장 가동 → 매출액 증대 (추정: 3,200백만 원) 및 신규 일자리 증대(약 30여명) 기여

- 한국전력공사 방문, 기업애로 대책회의 실시 ('18.1.)

< 협의 내용 >

- 기업애로 접수 후 기업의 심각한 현 상황을 전달하고, 송전선로 공사기간(3개월)을 단축하여 원활한 전력 공급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 적극 논의
 - ※ 참석자 : 안전도시국장 외 3명 및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팀장 외 2명
 - ⇒ 송전선로 증설 공사기간 임시전력 투입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요청
- 동일 부지 내 기업과 전력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송전선로 증설 및 임시전력 투입 없이 전력공급 실시 ('18.2.)

-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2개월 간의 노력('17.9.~'17.11.)

1	건축 허가 사항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공장 경매 → 건축허가(증축, 2013년)사항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건축과 협의
2	대기 및 폐수 인허가 변경 신고	공장 인수에 따른 환경인허가 사항 변경 필요 → “부도 기업-경락 업체-인수 기업” 3자간 협약을 통해 변경신고 수리	경기도 협의
3	공장 진입로 확보	기존 공장 진입로가 경매 과정 중 타인에게 경매, 공장 부지 맹지화 → “도로과-동두천경찰서” 공인협의를 통해 국도 진입로 확보	도로과 및 동두천경찰서 협의

- 뿌리산업 기업 유치에 따라 협력업체 추가 유치 등 파급효과 발생
- 당기순이익 약 4배 증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항공사진



공장 전경



제조시설



기업어로 청취

적극행정? 어렵지 않아요!



☎ 작성자 경기도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정유진 031-860-2281

지난 5월, 규제개혁 경진대회 출전을 결심하기 전까지 저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담당 주무관님께서 위의 사례로 같이 대회에 출전하자고 하셨을 때,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적극행정이라고?'라며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주 법 외에도 타 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업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 타 부서의 담당자들과 많이 소통하고 논의하며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 언뜻 사소해 보이는 기업의 애로에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것 등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뛰어다니는 전임자를 보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함께 소통하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임을 알게 해준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감사하며, 새내기 공무원임에도 우리시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하게 해주신 과장님, 팀장님들, 믿고 응원해주시고 매일 찾아가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우리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도시개발 지연, 지역발전 정체 등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수년간 노력 끝에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한곳 한곳이 소중한 우리시에 입주할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처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04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096

개선배경



- 경기도 양주시는 능원금속(주) 및 (주)뉴옵틱스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후 소유권보존 등기시 과도한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서를 받음.
-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에 따른 신규 보존등기시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운영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기업들은 기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 토지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보험수수료가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舊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개선내용



개선전

- 토지개발에 따른 보존등기 신청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함



개선후

- 예외 규정으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일자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토록 허용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8.12.04.)



-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등기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KBS

번지수 하나 바뀌었다고 5억 내려?

기사일력 2014. 12. 09. 오후 1:1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8일

양주시, 획기적 규제개선...우수 기업 입지 지원 화제

오명근기자 omk@munhwa.com

경기 양주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 정책을 통해 산업단지 유치 기업의 입지 조성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3000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19만㎡)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으로 연면적 6만여㎡의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이 지적 공부가 정리되도록 규정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걸림돌이 됐다. 해당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설정을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등기 관련 수수료 비용 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성과로 산업단지 조성파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공부정리를 위해서는 등기기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근저당권이 공동 설정되어 있을 경우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 원을 줄였다.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보건· 사회복지



3 PART

- 01.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32
일자리 창출
- 02. 미용업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37
1/3이상 투명하게 설치 조항 삭제
- 03.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핼피로 41

01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승객과의 의사소통 문제만 해결하다면,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진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031-590-2298

개선배경



- 청각장애인의 신체능력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하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들보다 취업이 어려우며,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현행법 상 청각장애인도 제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함에도,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개선내용



개선전

- 청각장애인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후

-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요한 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 가능, 시민들의 편견 및 인식전환, 일자리 창출 기대

- 2018. 9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 2018.12월 보조금 지원절차 등 세부 업무 처리지침 마련
- 2018.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3사, 코엑터스(주)와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19. 1월 프로그램 본격 시행
 -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상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우려를 해소

기대효과



-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후 청각장애인 7명 고용, 맞춤형 취업설명회를 통해 2명 추가 고용, 총 9명이 고용됨.
-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및 택시회사의 구인난 해소,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 효과 발생
-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 및 인식전환 기대

- ☑ 코엑터스(주)개발한 어플리케이션 (GOYOHAN)이 설치된 태블릿을 운전기사석과 승객석에 설치, 상호간 의사소통 가능
- ☑ 3가지 소통방식을 제공(음성, 태블릿 키보드, 터치패드), 목적지 전달 및 주행 중 메시지 전달 가능



2018년 12월 21일 (금)

종합

국민일보

조광한 남양주시장 “청각장애인 안정된 직업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운영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최초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운영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최초



남양주시와 지역내 택시업체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업무협약을 지역내 택시업체들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내 택시회사인 금성운수(합), 영훈운수(주), 신안운수(주)를 비롯해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코엑터스(주)가 참여했다.

고요한택시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GOYOHAN이 설치된 태블릿을 이용해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기사가 확인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내 일반택시 3개 업체와 도입을 추진했으며, 승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택시 부착용 스티커 디자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고요한택시 프로그램에 대한 운전시설·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외 홍보지원, 청각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 등을 협조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택시분야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하는 성취감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택시 서비스 구현과 더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편견 해소, 복지증진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요한 택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성운수(합)에 청각장애인 2명이 입사해 수습운행을 시작했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9명의 청각장애인이 영훈운수(주), 신안운수(주) 등 3개 택시회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한 택시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 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작성자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노현호 031-590-2298

신체적인 장애로 택시 운송사업 현장에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에게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택시기사 취업이라는 일자리 창출의 과정을 함께 한 사업담당자로서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8월 관내 법인택시 신안운수 관리자가 대학생창업동아리 코엑터스가 개발한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접한 후 이를 도입하여 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청각장애인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소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9월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고용 택시업체 3사 및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코엑터주(주)가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처음 접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표시하는 민원이 시청에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설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 도입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실과소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에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설명회에 협조를 받아 ‘청각장애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좋은 기획의도가 담긴 사업이라 EBS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알리면 알릴수록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구인난도 해소하며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설명회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지난 7월까지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9명이 관내에서 택시기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채용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고용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에서는 고요한택시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고요한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청각장애인의 채용 및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내 택시운수업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홍보부족으로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주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과 블로그 및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널리 알려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은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02

미용업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1/3이상 투명하게 설치 조항 삭제

미용업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만족증대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식품정책과 031-8024-3880

개선배경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피부관리·제모 등과 관련된 영업을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기준은 작업장 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인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음.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Ⅱ. 개별기준 4. 미용업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4)항에 따라 시설의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1이상 투명하게 하여야 함. (5) 작업장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선내용



개선전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설치



개선후

- 관련 조항 삭제 (예정)

- 경기도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건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한 사항임.
[➡ 19.4.17 : 경기도 규제혁파 순회간담회에 건의
➡ 19.9.19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관련 조항 삭제 예고]

개선효과



- 미용업은 손님의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특히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후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피부미용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



19.4.17. 2019년 규제혁파 평택시 순회 간담회



19.4.17. 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건의



미용업(피부) 시설 현황 ①



19.4.17. 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건의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서 불멘소리…규제완화 제안

미용업 투명한 출입문, 물류단지 건설 착수기간 등 지적

손님이 어느 정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상 출입문의 3분의 1은 투명하게 해야 하니 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규제혁파시·군 순회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평택시 부시장, 담당 부서 관계자,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미용업계 관계자는 "웨딩 센터 안에 있는 피부관리숍이어서 대부분 예비 신부들이 고객인데 투명한 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고 전했다.

평택시 위생과는 미용업계 관계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

제하는 것이 어떻냐는 개선 방안을 내놔다.

규제혁파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평택시에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가 지난 2월 말 현재 총 1천402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가 그간 제기된 민원 중 미용업계 관련건 외에도 2가지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류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착수 의무기간을 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실제로 평택의 한 물류단지는 지원시설 분량이 2015년 완료됐으나 2018년에도 지원시설 건설공사 착수율은 60%에 불과해 올해 11월이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도시공사는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대상에서 '지원시설'은 배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물류단지에 기업 입주자 느끼지는 상황에서는 상가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법상 기간을 넘으면 이행강제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결림돌이 되고 물류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업소나 에너지 소비업체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추후 목표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현행법상 4년간은 계속해 목표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논의된 과제는 내용을 보완 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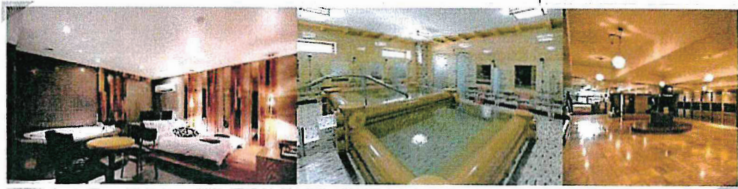
평택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경제용 기자 kdw@hyundai.co.kr

17.5 X 17.8 cm

미용업(피부) 시설 현황

- ◆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30.~11.9.)



●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30일(월)부터 11월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설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일반숙박업'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30객실 또는 연면적 1/3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2017두34087)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1/3 이하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동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동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설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설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샤인샵)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설 또는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시설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서, 이용업소 내의 '별실' 설치 금지는 유지됨

● 목욕업소의 이설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점침방 자유출입 시간을 조정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설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 한다. 24시간 점침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할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03

시민과 함께 남비를 펴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노인복지과 031-369-6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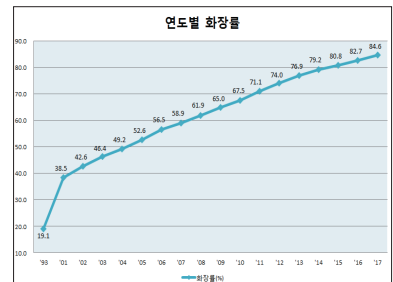
개선배경



- 화장물의 급속한 증가로 화장시설 부족
 - 장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10명 중 8.5명이 화장을 선택할 정도로 화장물 지속 증가
(화장물 전국 평균 84.6%, 경기도 평균 88.3%,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 경기도의 경우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에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타 지역 원정화장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가중
 - 참여시 사망자 기준(화장물 88.3%적용)으로 원정에 따른 화장시설 이용 추가 부담액 100억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 (단위 : 원)			
지역	관내	관외	비고
서울추모공원	120,000	1,000,000	
인천가죽공원	160,000	1,000,000	
수원연화장	100,000	1,000,000	



개선내용



개선전

- 화장장 건립 官 주도, 하향식(소극행정)
- 사업지역 官에서 확정
- 이해관계자 참여 및 대화 부족
- 경기도 광역형 화장장 부재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허용불가



개선후

- 시작단계부터 시민주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공모를 통한 자발적 경쟁으로 사업지역 확정
- 건립추진위원회 9회 및 실무협의체 31회 운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차단
- 5개시 지자체가 함께하는 '경기도 광역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 시민과 5개시 지자체가 함께하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 5개시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체결[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2015. 6. 8)
- 법률규제(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허용불가)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2018. 6. 20.)
-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착공 (2019.1.25.)

개선효과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행정 실현
– 시민중심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에 의한 정책결정 실현
–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고안을 기준으로 후보지 공개모집
– 6개마을에서 유치 신청 후 각 마을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직접 설명 후 최종 후보지 선정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공공성 및 연대성 강화
-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유경제 실현
– 5개 지자체 공동건립으로 각 지자체별 최소 300~500억, 총1,500억 내외의 중복시설 예산 절감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경제 실현
– ‘실질적인 경기도 광역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5개 참여 지자체 300만 시민의 원정화장에 따른 시간적 손해(4~5일장) 및 경제적 차별 해소(연간155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산유발액 2,210억원, 고용유발효과 3,320원, 부가가치유발액 1,661억원

단계	최종수요	경제적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명)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건축단계	91,407백만원	108,747백만원	63,042백만원	1,417명
운영단계	132,147백만원	112,306백만원	103,124백만원	1,903명
합계	223,554백만원	221,054백만원	166,166백만원	3,320명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님비를 핼피로 전환하자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작성자 경기도 화성시 노인복지과 진정웅 031-369-6290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 이 과정 속에서 필수시설 중 하나인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은 대다수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장사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화장률이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져 조만간 90%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3곳밖에 없어,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은 원정화장, 4일장을 치러야하는 사회·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 각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장사시설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식(공모)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님비를 핼피시설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명실 공히 광역형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과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허용불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지속적 건의로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행정(시민의 참여유도, 인근 지자체의 협력, 법률개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어 냈으며,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국토· 지역개발



4 PART

01. 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46
02.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49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51
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허용	54
0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57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가능!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9
07. 고덕지구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실	62
08.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65

01

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규제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추진부서 경기도 지역정책과 031-8008-4846

개선배경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면적 전국 363km²임
- 그간 지자체는 자원부족으로 도시공원 해소에 소극적이었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감수하였음.
- 공원이 실효되면 등산로 폐쇄, 지장물 설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개선내용



개선전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
약 145개소, 총 9km²
(축구장 약 1,260개 면적)
- 지자체 필요 예산 약 3조원 추정



개선후

-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 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 〉

- (개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도록 '09년 도입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 (훼손지*의 정의)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
 - *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필지
- '17년 6월부터 도내 미집행공원 전수조사, 도·시·군·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개최, 국회·국토부 제도개선 방문·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적극행정을 추진
 - '18년 4.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 '18년 8월 관련 지침 개정

기대효과



- 한 번의 개정으로 세가지 효과 즉, 시·군은 GB내 미집행 공원 해소로 약 3조원 예산 절감
- 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
 - 1km²의 공원이 할 수 있는 일 : 45만 그루 나무조성효과, 연 16.2톤의 미세먼지 흡수, 18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 제공
- 도는 보전부담금의 재정적 불이익 해소

〈부천 원종·괴안 공공주택사업 훼손지 복구계획〉

- 위치 : 부천 원종동 일원
- 사업면적 / 훼손지 복구면적 : 280,000m² / 42,000m²
- 사업내용 : 부천 근린공원 조성 (복구사업비 150억)



1석 3조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부 작성자 경기도 지역정책과 박인찬 031-8008-4856

경기도의 규제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 경진대회에 발표자로 처음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그 날을 돌이켜 보면 본선에 올라온 10개팀중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어 심적 부담도 컸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심사위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자 팀원들과 같이 준비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네요.

‘20.7월 최초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를 개선하고자 ’17.6월부터 사례조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현행 : 건축물 · 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공원 · 녹지 등 조성)

그 결과 ‘18.4월 “미집행 도시공원”을 훼손지 복구대상에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주민, 도, 시·군에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은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 도는 보전부담금 재정적 불이익 해소, 시·군은 미집행공원 해소로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제개선의 첫 걸음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위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합리적 대안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규제개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무 중 불합리한 부분 찾아 보세요.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은 무한대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2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GB내 공판장 설치주체 완화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길이 열린다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032-8075-4251

개선배경



- 고양시(시행자 : 한국화훼농협)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함
- 한편,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어 관련법상 공판장 설립 주체가 지역조합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품목조합인 화훼농협의 사업 추진이 불가, 사업 백지화 및 국비 반납 등의 위기에 봉착함
- 화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농협이 화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자격 완화가 필요

〈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

- 사업부지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1-11외 4필지
- 사업비 : 195억원(국비 4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115억)
- 사업규모 : 41,779㎡(공판장, 집하장, 구판장 등 건축면적 22,485㎡)

개선내용



개선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가 “지역조합”에 한정



개선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를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 2019. 2. 경기도청 규제개혁 담당관실에 개정 건의 요청
 - 2019. 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에 개정 건의 요청

- '19. 12월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국무조정실, 경기도, 고양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
 -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대하여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5. 마. 4)항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선효과



- 화훼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생산·경영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 유통구조 개선→ 화훼소비 촉진→ 화훼산업 재도약→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 기대
 - －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기능의 강화로 농가에 불리한 민간 시장 주도의 화훼유통을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 소득 증대
 - － 판매가격 인하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현재 국민 1인당 1만 2천원의 화훼소비 금액이 2만원 이상으로 증가 예상
 - － 현재 6천억원 규모의 화훼시장이 향후 1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 중도매인 매장 입점(70여 개, 약 140명), 경매장 운용인력(약 200명) 등 일자리 창출 효과



화훼유통센터 대상지



화훼유통센터 조감도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032-8075-3081

개선배경



- 고양시의 약 48%, 127.4km²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특정 목적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기존 거주 중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고 해제(행정위탁)를 통해 규제 완화 추진
-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해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국방부에 요구하는 형식을 취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타 시·군에서도 적용 가능

개선내용



개선전

- 고양시 전체 면적 중 약 48%(127.4km²)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 규제지역의 토지가치 하락,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발생
- 통상 1개월 이상의 군협의 절차 소요



개선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 협약 체결(18.6km²)
- 규제지역 내 원활한 재산권 행사 가능
- 군협의 기간의 획기적 단축 (1개월→1일)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고양시·군부대 간담회 및 협의(시장·사단장 면담 등 실무협의 40여 회 개최)
 - 가능성이 높거나 수해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부터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군·관 협업체계 구축
 - 17.6km²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일부 지역(18.6km²)은 행정위탁 협약 체결
- 군부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프로그램(Q-GIS)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보급
 - 군부대(군보 협의 담당)와 시(허가 담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업무 매뉴얼 개선 및 서식 표준화

개선효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약 7만 명이 직접적인 수해를 받게 됨.
- 토지 가치 약 12조6천억원 상승
 - 경기개발연구원 『군사시설 피해실태 연구(2008)』에서 제시한 '자산가치 손실 추정방법' 적용
-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기대
-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민원 접수시 통상 1개월이 걸렸던 군협의 기간이 1일로 획기적 단축
- 전산조치 프로그램 구축으로 민원처리담당자(군·관)가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을 즉시 확인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 사유재산권 행사 활성화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부대에 대한 인식 개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최신기사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등 협의 빨라진다

송고시간 | 2018-04-18 08:47

표준서식 만들어...필수 사항 명시·첨부서류 최소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軍)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고양=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시와 군이 표준 서식을 만드는 모습. 2018.4.18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gsh@yna.co.kr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부 작성자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조용주 031-8075-3081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각종 공공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군사규제 피해현실 기초조사와 군 전문가의 전략적 제안 등을 검토한 종합 논리를 개발해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하고자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18.6km²), 군협의 서식 표준화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규제 해제는 군 당국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관례였기에, 우리시 주도로 군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0여 회의 실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불편 개선이라는 최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관이 협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준 시장님, 실·국·과장님, 실무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행안부, 경기도 주관 경진대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규제 개선에 지자체, 중앙부처,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지정 해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고양시는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평화경제특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규제로 인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았던 시민들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허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신고 허가

 추진부서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과 031-760-2952

개선배경



-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예, 컨테이너) 설치가 불가함
-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불편 발생
 - 제한목적 :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선내용



개선전

- 가설건축물(예 : 컨테이너) 설치 불가



개선후

- 가설건축물(예 : 컨테이너) 신고 허가

- 현황
 -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탄벌A 지구단위계획구역(탄벌동 138-3번지 일원)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허 사례

신청일	신청위치			신청인	가설건축물 신청목적	인·허가부서 협의의견
	위 치	면 적	지목			
19.06.18	탄벌동 144-6	844㎡	대지	심○○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창고) 건축면적: 61㎡(4동)	부동의
19.06.04	경안동 67-30	63㎡	대지	박○○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사무실) 건축면적: 18㎡(1동), 연면적: 36㎡(2층)	부동의
19.04.30	추자리 45	3,293㎡	대지	김○○	용도: 컨테이너조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건축면적: 90㎡(4동)	부동의
18.12.27	경안동 73-13	325㎡	대지	박○○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창고) 건축면적: 17.1㎡(2동)	부동의

- 민원사항 확인 → 사례조사(인·허가부서 불허가 사례) → 인·허가부서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자체방안 모색(가설건축물 허용 개선방안 검토) → 방침설정(내부 방침결정 및 위원회 심의) → 개선 운영방안 인·허가부서 전파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허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 1건 (2019. 9. 4.)
※ 향후 허가 건수 증가 예상
- 이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용 할 수 있었으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일괄 허용함으로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절감 예상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용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애로사항 해소



"교육, 문화, 시민과 함께"

광 주 시

수신: **수신자 검토**
(종류)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용 통보(작곡행정)

1. 광주시 고시 제2018-290(2018. 05. 18.)호와 관련입니다.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에 불가합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협의시 부동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작곡행정 차원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로 하더라도 조성이 완료된 대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점 1-5-4면에서)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 협의 회담하는 조건으로 해탈토록 운영 개선(도시계획과-4000019.08.18.3호 발의내결, 제19회 도시계획(제19회)위원회 심의: 원안수용)코자 하오니

3. 인·허가부서에서는 불합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가설건축물신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신고가 부동의(회피)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연계 제로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구분	구분명	위치	면적(㎡)	제한사유
-	구분명	-	000/000	-
가	단위A,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A 100-000지 일원	250/713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나	단위B,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B 100-000지 일원	225/522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다	단위C,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C 100-000지 일원	175/564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라	단위D,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D 100-000지 일원	225/522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마	단위E,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E 100-000지 일원	225/522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바	단위F,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F 100-000지 일원	225/522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사	단위G, 지구상토지개발구역	단위G 100-000지 일원	225/522	지구상토지개발구역 지정

※ 단, 광주시 고시 제2018-484호(2018.11.30)로 결정된 광주역세권 2단계(3)지구(지)를 제외한지 일원, 군시립에지점 250/713지점(1)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개발행위허가 불합(불합)지 일원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검토보고 1부, 끝.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부 작성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과 김준섭 031-700-2952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광주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을 설정하여 시가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행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해당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법령 그대로 업무를 처리함은 당연한 의무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법령해석이나 업무추진에 유연성을 갖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공직 분위기, 적극행정 사항에 대한 팀장·과장·국장 등 팀원들의 호응으로 인해 추진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적극행정” 내용에 대한 경·중·수혜나 효과의 정도와 관계없이 작고 경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면 경직돼있고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함으로써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와 같은 적극행정이 민간부문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추진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031-590-2385

개선배경



- 남양주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 및 환경평가등급 기준 미충족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 불가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에 할당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범위 내 추진 가능하나, 남양주시 해제물량 부족
 - 사업대상지의 환경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등급(3~5 등급) 기준에 부적합

※ 관련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

개선내용



개선전

-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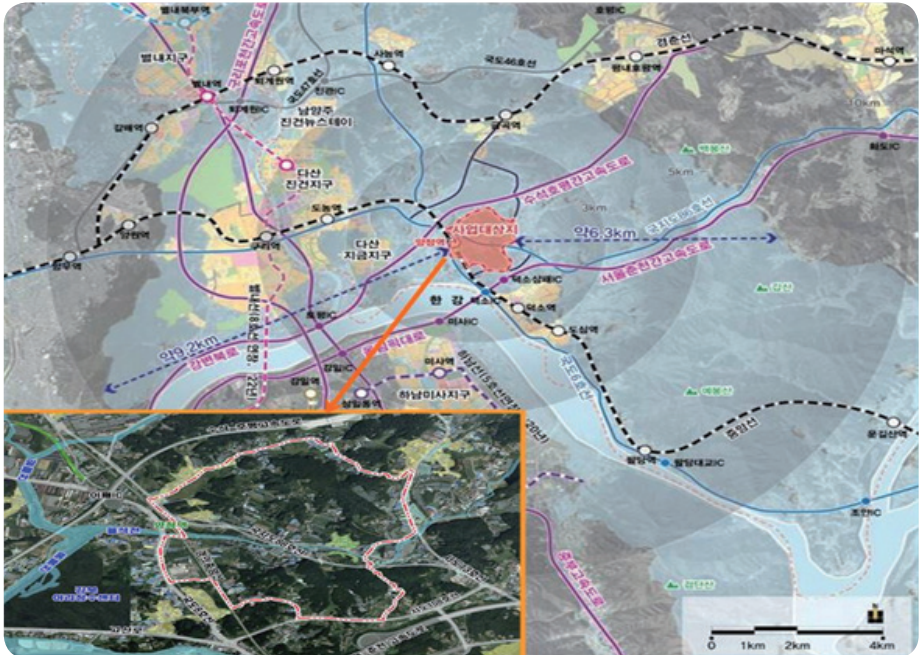
개선후

-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4호/'18.6.8.)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가능

-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추가 확보(2,228km²)
- 국토교통부에 환경평가등급 조정 건의로 환경평가등급 조정 (2→3등급 / '10.7.15., '11.2.8.)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19 ~)
 - － 다산신도시 및 3기신도시(왕숙1지구, 왕숙2지구)와 연계한 지역중심도시 조성
 - － 첨단산업시설 및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실현



위 치 도

경기도민일보

2018년 06월 01일 (금)

종합 02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남양주시가 31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외부음, 양정동 일원에 206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는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 거점도시와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사업은 올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년 개발계획 수립, 2020년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기까지 장기간의 생활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성원에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양로기자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 임시사용범위 확대로 향토문화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031-481-6981

개선배경



- 「농어촌정비법령」 및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임시 사용 범위(연구·시험용 작물 재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간척지 매립 공사(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간척지 내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어 있어 토양·수질 오염 및 악취 민원 발생
- 무단 방치 쓰레기 주변 미관을 저해하여 안산시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

※ 관련규정

－ 「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개선내용



개선전

- 개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제한)
 -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개선후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확대)
 - 단년생 작물의 경작
 -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 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경과〉

- － 법률 개정 간담회 및 개정의견 검토 요청 : 2015. 8.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5. 12.
- － 대송단지 안정적 사용방안 연구용역 실시[경기TP] : 2016. 1.~10.
- － 대송단지 연구용역 요약본 제출 및 반영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2016. 8.
- － 사용목적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 2016. 9.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7. 4.
- － 규제개선 건의(안산시→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 2017. 6. 23.
-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1차) : 2017. 10. 13.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2차) : 2017. 11. 29.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경기도→국무조정실) : 2018. 1. 23.
-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방문 및 연찬 : 2018. 1. 30.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신문과) 주재 현장 컨설팅 실시 : 2018. 3. 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8. 5. 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18.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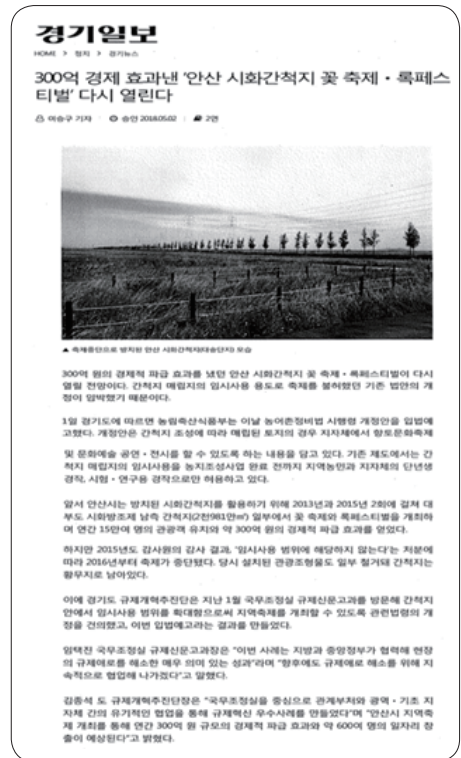
개선효과



- 다양한 향토 문화 축제·공연 전시를 통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적 파급 효과 : 300억원(년) / 일자리 창출 : 약 600여명
- 미준공 상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 합법적 사용가능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민원 해소



위치도



언론보도

임시사용 간척지 사용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 작성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백종선 031-481-6981

오랫동안 방치돼 오던 시화간척지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튠업축제”와 같은 꽃 축제와 “락 페스티벌”등을 유치하며 외부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으로 상가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변화되는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임시사용 간척지에서 할 수 있는 “임시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따라 관광 조형물등이 철거되고 모든 축제가 중단되면서, 주변 상가 경기 침체는 물론, 장기 방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안산의 관광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용 임시 사용 범위를 “연구시험등을 목적으로 단년생(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타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척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그동안의 축제, 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실시 및 상위기관에 불합리한 내용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안산시 예산법무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간담회 및 현장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마침내 2018. 8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마침내 그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지침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던 것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축제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두드렸던 규제개선 요구사항이 관련 기관 및 부서 사람들의 협업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 시화간척지에 행사 및 축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어, 향후 안산시 대부지역은 이전보다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 약간의 불편함으로 생각되어질 규제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많은 변화를 포기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개선되어야할 규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07

고덕지구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정책기획과 031-8024-2231

개선배경



- 고덕지구 내 탄약고 이전 지연('15년⇒'21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존치
 - 군사시설보호구역 존치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정상 추진 어려움.
- ※ **관련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개선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국방부 고시 제2018-34호(2018. 12. 13.)]
 - 해제지역 : 매그넘탄약고 주변 143㎡/161필지 적기 건축가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19. 3. 5.)
 - 알파탄약고 주변 대체도로 개설가능/약 5,100세대 교통 편의제공

추진과정



- 개발행위 허가(대체도로 포장) 협의 요청(LH→평택시→공작사) : '16. 9.19
 * ('16. 9.19) 폭발물 제한보호구역내 기반공사 불가(부동의)
- 관계기관 회의(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군본부, 공작사, 평택시, LH)
 - 3회('16. 9.19, 9.30, 11.30)/탄약고 분산저장을 통한 해제 요청
 * 안전성 검토용역을 통해 방호시설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재협의(공작사)
 ⇒ 고덕지구 내 탄약고 폭발영향 검토 용역 실시(LH/'17. 1월 ~ 4월)
-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개선과제 검토 요청 : '16.12. 8
 * 개선과제 :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된 군보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행위 허가 완화
-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개선과제 검토 요청 : '17. 3.16
 * 개선과제 : 고덕신도시 탄약고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군보구역 행위(수용곤란)
- 행위허가 협의(공군본부, 경기도, 평택시, LH) : '17. 3.28
 * 탄약폭발 용역결과 및 방호시설 계획 반영/행위허가 협의 추가 대안 논의
- 대체도로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 '17.12월 ~ '18.11월

- 관계법령 개정*으로 규제개선 추진(국방부) : '18.12.10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이 확보된 대체도로는 개설이 가능토록 함.
- 매그넘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43만㎡) : '18.12.13
* 매그넘탄약고 탄약 분산저장 합의서 체결('18. 1.19), 시행('18. 6. 4) 및 완료('18. 7.27)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개정(국방부) : '19. 3. 5

개선효과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 예방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도시기반시설의 적시제공으로 단지 입주민, 산업단지 입주업체 교통 편의 제공 및 도시 활성화(집단민원 예방)
 - 직접 : 아파트 3,284 세대, 이주민 1,817 세대
 - 간접 : 북부지역(송탄) ~ 서부지역(청북) 주민 이동거리 단축
-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부 작성자 경기도 평택시 정책기획과 김대욱 031-8024-2231

그 동안 다년간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업무를 처음 하게 때에는 느낌은 생소하다! 어렵다!! 애매모호하다!!!가 전부였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았을 텐데 왜 그 규제를 굳이 없애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하여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을 만나면서 이런 나의 의구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시민과 기업에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규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이 과제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람과 기관과 협업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가 규제개선에 있어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이하“고덕지구”) 조성하던 중 고덕지구 내 탄약고(군사시설) 이전 지연(2015년→2021년)으로 고덕지구의 정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군본부, 공작사, LH, 평택시)과의 협의를 임하고 각 부서(주민지원과, 도시계획과, 기업투자과 등) 간의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8.12.13)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업무를 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각 부서 간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규제 개선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8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투자진흥과 031-940-5796

개선배경



-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규제 뿐만 아니라, 군사규제, 농지구제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포함한 각종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외 경기침체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

개선내용



개선전

-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개선후

- 산업단지 주민설명회
⇒ 주민-시-사업자 협력체계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면제
⇒ 심의면제, 6개월 단축
- 산업단지승인 절차간소화
⇒ 일괄의제, 12개월 단축
-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승인
⇒ 先승인, 後토지확보 가능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 240회 협의추진 ⇒ 60개사 분양 완료

실무상 어려움



-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농지구제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기업체, 협회, 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여도 접경지역으로 인한 남북관계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2·3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수도권정비계획법」,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중앙부처와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 요청 등 규제개선과제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경제특구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창출 2,000여명, 생산유발효과 11,862억원을 시작으로 단계별 개발 추진이 확산될 것입니다.
-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인 경기도(21개 시·군·구), 인천광역시(2개 군·구)는 산단 절차 간소화, 수도권 심의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며,
- 강원도(9개 시·군), 충청도(4개 시·군), 경상도(16개 시·군) 등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 도모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중국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 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 작성자 경기도 파주시 투자진흥과 장중규 031-940-5796

규제개선은 일자리창출이다!

기업하기 편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고 허가해주는 공무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해결사가 될때 비로소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 간 4년여 동안 반도체 · 디스플레이 · IT · 전자 등 관련 협회, 단체, 기업체 등에 240회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업단지에 2천명의 직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추진 될 2 · 3단계 산업단지에 8천여명의 고용창출과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어 낙후된 파주 북부지역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 확실하며, 통일경제특구의 배후도시로서 체계적인 개발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파주시 공무원들은 더욱 발로 뛰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 및 규제에 맞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신산업



5 PART

01. 부천시 제조기업 IoT의 날개를 달다!	70
0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74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입지규제 완화	
03.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78
04. 자율주행시 실험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립니다!.....	80
05. 생명 살리는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	84
06.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 13조 시장 진입	87
07.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솔루션 공급기업 및	91
스타트업 시장 진입	

01

부천시 제조기업 IoT의 날개를 달다!

부천 IoT혁신센터, 신산업 기반 조성 및 규제개혁 선도

 추진부서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2

개선배경



- 2차 산업 중심의 전통 제조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저하
-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반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요구 대두
- 영세 제조기업의 신산업 기술·제품 개발 및 관련 규제 극복 여력 부족

개선내용



개선전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 환경

- 단순 생산기능 중심 영세 제조기업 경쟁력 약화, 지역 산업 성장률 저하
-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 및 규제 극복 여력 부족



개선후

IoT중심 고부가가치 창출 기능으로 전환

- IoT혁신센터 조성·운영으로 IoT융합과 부가가치 기술 및 상품 개발 유도
- 신산업 관련 규제 극복 밀착 지원

그간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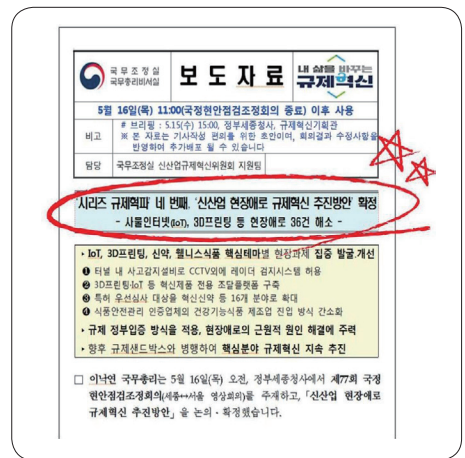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2015) → 부천IoT비전선포 및 IoT혁신센터 조성 계획 수립(2016) → 부천IoT혁신센터 개관(2019)
- 센터 내 기업 입주공간 마련 및 IoT융합 기술개발 견인을 위한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전통 디바이스 제조기업의 IoT기업으로 혁신 기반 마련
 - IoT 융합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참여 기업 38개사
 - IoT 제품 개발 완료 10건, 사업화 9건
 - (산업통상자원부) '2019. IoT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 사업' 공모 선정
- IoT 기술·제품 관련 신산업 규제 발굴 및 개선
 -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차량용 조명회로 관련규정 마련' 건의
 - (국토교통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판매시행 허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74호, '19. 10.)

개선효과

- 지역 디바이스에 IoT기능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IoT산업 저변확대
- 창조적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창업 활성화로 강소기업 성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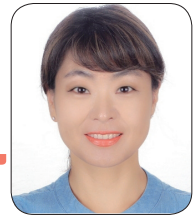


부천IoT혁신센터 개관 ('19.1.)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주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 시민과 함께 공직자가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부 작성자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김현정 032-625-2732

‘부천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제가 종종 외지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동신도시, 영화제, 만화축제 그리고 최근에는 3기 대장신도시 등 주로 문화도시·주거도시로서의 부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부천이 경기도 내 제조기업체 수 2위, 1960~70년대 경인공업지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역사를 같이 한 공업도시’라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천에서 살아온 저도 기업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부천시에는 1만 700여개 제조기업이 있고 이는 도내에서 화성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62%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90%는 생산품을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또 이들 중 37%가 센서·계측기·전기·전자 관련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기술개발 여력 부족, 글로벌 경쟁시대 경영환경의 악화, 폭발적 인구증가와 함께 공장지역의 주거지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위축되어 가는 지역 내 산업 환경, 거기에 4차 산업시대로 진입하면서 부천의 대다수 영세 전통 제조기업이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 생산기능만으로는 살아남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미래가 어두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도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천 산업계의 체질을 바꿔야 살아남는다는 절실함이 만들어낸 것이 ‘부천IoT혁신센터’입니다. 제조기업의 IoT 혁신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설립한 전국 유일의 기관이지요. 핵심 기능은 기존 제조기업의 제품과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융합은 창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 앞에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특히나 정부 규제에 취약합니다. 규제를 넘어설 힘도 없고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천IoT혁신센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IoT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건의되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 개정이 고시된 자동차 조명휠캡 개발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IoT혁신센터 내 입주 기업으로 제품 개발 중이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판매 허용이 되지 않았던 사례이지요.

부천IoT혁신센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년간 이를 기획하신 선배공무원들의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심,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인내와 부단한 노력에 후배로서 또 시민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 숙연해 지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자 큰 보람임을 새삼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천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축소판이지요.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고 교통 요지이지만 가진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경쟁력이자 자원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의 힘이기도 합니다.

0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입지규제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은준 031-228-2286

개선배경



- 첨단업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수도권,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 신·증설시 입지규제가 완화 적용 됨
 -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의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
 - 「국토계획법」 상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의 경우 허용
-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신산업을 반영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7.1.13) 되었으나 「산업집적법」에 미반영 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기술제품들이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 등 공장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 유치 애로 발생

개선내용



개선전

- 첨단업종 범위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07.12)
-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업종 미반영



개선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17.1) 적용
-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한 첨단업종(16개) 신규지정

- 2018.04.03. :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핵심안건 논의
- 2018.04.26.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2018-2호) 제출
- 2018.05.23.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 2018.05.26. : 규제개혁 법령개정 건의
- 2018.08.13.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의견 회신(부처의견 : 수용)
- 2018.08.22. :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18-435호)
- 2018.08.27. :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토론회 선정
- 2018.12.18. : 법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2호, 2018.12.18. 시행)

개선효과



- ICT산업 등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규제 완화
- 수도권 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간담회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규제추진단 활동보고서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기업입지 규제 완화



■ 작성자 경기도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은준 031-228-3284

안녕하세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업무 담당 박은준입니다. 제가 제출한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한 첨단업종 확대건의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2019년 5월 31일에 개최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입선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본선 경연대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8년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미래신산업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산업 융합기술과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지향형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여러 분야를 찾아보았고, 첨단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7년도에 제10차 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상에서는 아직도 07년도에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9차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적용하면 최근 새롭게 등장한 3D프린팅이나 무인(드론)항공기산업 등은 첨단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된 신제품들이 첨단업종으로 지정 받지 못해 공장입지 및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1982년도에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권역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 불가로 기업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일 경우 권역에 상관없이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및 행안부의 규제혁신 핵심안건으로 제출, 2018년5월 국무조정실 및 산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2018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산업분류의 현행화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무인항공기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의 신규 선정입니다.

이 개정 사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 가능한 것으로, 녹지면적 비율은 전국 약 62%, 경기도 약 21%, 수원 약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토지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 내 공장입지 확대와 신산업 창업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을 창업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2443

개선배경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권에 포함되어 56개 드론기업은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드론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횡성 등으로 이동하여 테스트하는 실정
 - 드론기업 R&D에 테스트가 6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산업의 특성상 조기상용화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여 테스트베드가 절실

※ 관련법령 및 규정

- 「항공안전법」제127조 및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 제21조(비행승인의 기준)

개선내용



개선전

-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 테스트 불가



개선후

- 3개의 시험비행장 조성으로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 테스트 가능

- 성남시, 공군,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이 협약관계를 구축하여 성남시가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기업체의 R&D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가능하게됨('19.2)

개선효과



-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공역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실험장이 조성됨
 - ※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행장 주변 비행 규제는 조종자 준수사항 중 해결 시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발생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 작성자 경기도 성남시 토지정보과 김기한 031-729-2443

2009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10여년 만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나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등의 최첨단 ICT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발달된 ICT산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지만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은 서울공항 관제권 규제로 기업체가 제작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테스트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안전과 보안의 민원에 부딪쳐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절실함이 큰 규제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통제관이 되기로하면서 협약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군 이 문제에 매달려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제공역의 난제를 풀어 나갔고, 은수미 성남시장도 발로뛰는 행정으로 직접 국방부를 찾아가는 등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드론조종자 규제중 관제권 규제 해결은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 시대의 화두인 민간부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04

자율주행시 실험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달립니다!

차량의 자기인증 면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031-8045-2211

개선배경



- '17.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용 차량을 수입했으나, 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기술개발에 큰 애로가 있었던 기업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게 되었음
- 수입차량이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 * 자기인증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동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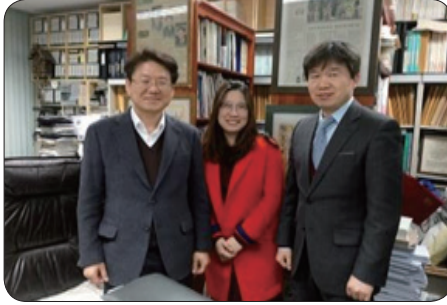


- 테스트용 수입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의 개선
- '18.12.18. 테스트용 수입차량 자기인증 면제 (규제 개선)
- '19. 6.21.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 득함 (최종 규제 개선)
- * '19. 6.22. 서울·국토부·과기부 주관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참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 운행

〈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 ① '17.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선제적 과제 발굴
- ② 중앙부처 건의 10회 : 행안부(5회), 국조실(3회), 중기부(2회)
- ③ 기업·전문가·중앙부처 간담 및 심층인터뷰 12회
- ④ 과제의 보완 20회

- '17.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기업 간담을 통한 과제 발굴
- '17.11.16. 행안부 건의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제」 (1차 건의)
- '17.12. ~ '18. 3. 과제보완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 간담 3회



※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 인터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시 자기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스타트업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음.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연구개발시
자기인증을 면제가 필요함.
(2018. 3. 19. 대림대 자동차관)

- '18. 3.20. 행안부 건의 「지역 혁신성장 테마과제」 (2차 건의)
- '18. 4.27. 행안부 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3차 건의)
- '18. 5.31.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4차 건의)
- '18. 7. 국토교통부 불수용 의견 회신
- '18. 7.13. 국조실 건의 「투자대기 기업 규제개선 건의」 (5차 건의)
- '18. 7.25. 중앙부처 불수용 재협의를 위한 기업 간담
- '18. 8.30. 자동차부품연구원 ○○○ 박사 자문
- '18. 8.30. 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 ○○○ 연구원 자문
- '18. 9.4. 자동차 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
- '18. 9.4. 국조실 임택진 규제혁신기획관에게 건의 (6차 건의)
- '18. 9.5. 서울대 차세대융합연구소 ○○○박사 자문
- '18. 9.7. 재협의를 위한 안양시· 행안부· 경기도 합동 기업 간담
- ⇒ 과제를 변경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안부에 재건의 (7차 건의)



기업 현장 방문(행안부· 경기도· 안양시)



'18.9.7,14:10~16:30

- '18.10.15. 재협의를 위한 기업 간담
- '18.11.20. 행안부 건의 「재협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8차 건의)
- '18.11.21.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심지는 위원) 에 재건의 (9차 건의)
- '18.11.21.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재건의 (10차 건의)

개선효과



- 다양한 일반도로 테스트를 통한 자율주행 AI 지능을 높이고 근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한 개발 본격화, 통신 등 150여개의 관련 산업군 성장 (세종 스마트시티 지선버스 자율주행 공유 운영 프로젝트에 참가)
- 기대효과 : 매출액 연 1,000억 이상, 투자금액 연 1,000억 이상, 일자리창출 연 300명
- 안양시 자율주행 도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마중물



테스팅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
'19. 6. 22.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월드컵북로 1.1km 구간 운행



행사관계자와 기념 촬영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내일신문

5G자율주행버스 서울시내 달린다

하반기 상업용 운행 ... 22일 일반인 시승행사

2019-06-21 10:50:40 게재

22일 5G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5G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상암 DMC 지역을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모습. 사진 SK텔레콤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을 달리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11인승) KT(45인승) 연면드솔루션(6인승) 스프링클라우드(13인승)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연세대(레이) 국민대(스포티지) SWM(니로)가 자율주행승용차를 담당한다.

"자율주행 모델 구축 등 안양시에 스마트 첨단도시 기반 형성하겠다"...최대호 안양시장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24, 수정일 : 2019-06-24

👍 좋아요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하기

👍 좋아요 0개 📄 Print 📄 PDF ✉ Email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부각

📅 전길현 기자 | 🕒 승인 2019.04.03 09:23

안양시(쥬SWM·발렌스 3개 기관 대표 양해각서 교환해

[매일일보 전길현 기자]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에 안양시가 자율주행차량 선도 기관으로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어제께 최대호 안양시장, 김기혁 쥬SWM 대표, 알란 샤아리 Valencs Semiconductor Ltd(이하 발렌스) 부사장 등 3개 기관 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를 교환한 쥬SWM는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이다. 쥬SWM은 이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해 10월에 열린 한국전자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05 생명 살리는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임시허가 1호 성과 사례기반 마련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031-8045-2211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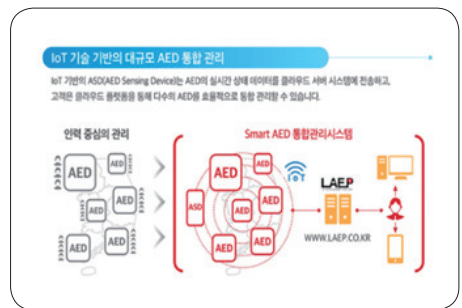


- '18. 1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량의 AED(자동심장충격기)를 IoT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일명 스마트A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시장 진입이 막혀 있었던 루씨앰(주)의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병행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함.

[스마트 AED]



스마트 AED
(AED, 케이스, IoT 단말기 1식)



스마트 AED 작용원리

- 본사가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구역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하여 AED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입찰이 제한 되는 등 시장 진입 규제

-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 신기술 규제혁신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나 열악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기엔 다소 벅차다는 판단 하에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서류의 작성, 자료의 보완, 현장사례 제공, 위원회의 대응 등을 시가 적극적으로 밀착 조력키로 함.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개선내용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시장 진입
 - '19. 4. 29. 16:00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조건부 임시허가 결정
스마트 AED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 판매 허용

〈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 ① '18. 1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 최초 과제 발굴
 - ② 중앙부처 건의 4회 : 국조실(3회), 행안부(1회), 중기부(1회)
 - ③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전 과정 밀착 지원 10회
: 서류작성 지원 5회, 샌드박스 업무담당자와 업무연락 및 협업 5회
 - ④ 기업·전문가·중앙부처 간담 추진 5회
※ 인허가부서와 협업을 통한 조직적 대응
 - ⑤ 과제의 보완 10회
- '18. 12. 14. 16:00 기업 간담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최초 발굴
 - '19. 12. 18.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작성 건의 (1차 건의)
 - '19. 1. 17. 10:00,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안내 및 기업 과제 추가 보완
 - '19. 1. 30. 국무조정실에 보완 과제 제출 완료 (3차 건의)
* 국무조정실 담당사무관 업무연락, 2월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 과제 상정
 - '19. 3. 4. 행정안전부에 규제개선 건의「테마규제 혁신과제 제출」(4차 건의)
 - '19. 3. 6. ~ 4.29. 규제샌드박스티م과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 과제의 보완 및 대응 관련 업무연락
 - '19. 3. 21.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개선 건의 (5차 건의)
 - '19. 3. 산업융합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대응 사전 전략 간담회
* 의료기기판매업 인허가부서, 규제개혁팀이 합동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 '19. 3. 22. 17:00 산업융합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조건부 임시허가 의결
* 허가부서, 규제개혁팀이 전문위원회 직접 참가, 발언하여 기업을 지원함



'18. 12.~1. 기업 현장간담
(안양시 규제개혁팀)



'19. 1.22. 국무조정실 기업
간담
(국조실 신산업TF, 경기도,
안양시)



'19. 3. 위원회 대응 전략회의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지원)

개선효과



- 주수요층인 AED 법정 의무구비대상인 공공기관 등 판로 확보 (포스코 등 다수 계약)
- 세계 최고 성장률(연 49%)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시장 선점 [혁신 성장 기대] – '19. 10.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계약 체결
-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득('19. 9.)
- AED 관리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 예방
- 사망원인 1위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3배 이상 증가

〈 신문보도 보도사항 〉

한국무역신문

의료기기 대량 수주했으나 수출 못 할 뻔...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로 지원

2019.05.23 17:29 입력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량의 의료기기를 수주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돼 있어 수출판로가 막히게 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안양시에 따르면 의료기기 전문생산 업체인 루씨엠은 'Smart AED'라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 했다. IoT기술을 접목한 이 기술력은 1명의 관리자가 배터리 상태 등 기기의 모든 사항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혁신적 기술이다. 기술력을 인정 받은 루씨엠은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미국의 Zoll(AED제조사)사로부터 싱가포르에 5000대 설치 협업 제안을 받고 이에 합의 했다.

하지만 루씨엠 본사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돼 있어 수출 판로가 막히는 상황에 처했다. '공장'은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 수리가 불가해 입찰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에 안양시는 국무조정실 간담회 등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푸는 임시 승인을 받아냈다.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수출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위해 관내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의 규제를 이 제도 트랙에 진입시키는 등 기업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지연 기자

06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 해소 13조 시장 진입

품목 신설, 보험급여 등재, 약물주입속도에 따른 급여규제 해소 등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031-8045-2211

개선배경



- '17. 9.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007년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고 2010년 특허 취득,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단 한 대의 제품도 팔 수 없었던 (주)메인텍의 애로를 접하고 경기도와 협업하여 지난 3년 간 5단계에 걸쳐 규제개선을 추진함.
- 제품 원천기술의 핵심인 소모품(실린더식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 신설 및 별도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지 않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입 불가

※ 관련규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개선내용



- 5단계 중첩 규제 개선
 - (1단계) '18.1.(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혁신성 인정, 품목 신설 원안가결
 - (2단계) '18.8.(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예비급여 결정
 - * 재료비 현실화 : 750원/개 ⇒ 25,000원/개
 - * 심평원이 품목 신설 전 급여를 결정한 행태개선 사례
 - * (주)메인텍 투자유치, 고용 창출
 - (3단계) '18.10.(식약처) 품목 신설
 - * 실린더식약품주입펌프용 실린더카트리지(품목분류번호 : A79040.02)
 - * 의약품주입펌프 소모품 분야 품목 신설은 국내 최초
 - (4단계) '18.12.(보건복지부) 급여 시행(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에 한함)
 - * 급여 제한(추가 규제)으로 판매와 수출에 제동 걸림
 - (5단계) '19. 7. 29 (보건복지부) 급여 제한규제 최종 개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시행 '19.8.1.)
 - ⇒ 약물 주입속도에 관계없이 급여화 ! ⇒ 시장 진입
 -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 본인부담율 0%
 - 약물주입속도가 5ml/h 이상 본인부담율 8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개선전		개선후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 조절세트 등의 급여 기준	가. 급여대상 1) 8세 미만 소아 - 이하 생략 - 나. 치료재료 1) 수액유량조절세트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 3)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다. 다만, 상기 나.의 2), 3)은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함 ※ 약물주입속도가 5ml/h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도 사용불가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액유량 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 이하 생략 -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① '17. 9. 26.「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 최초 과제 발굴
- ② 중앙부처 건의 10회 : 국조실(2회), 행안부(4회), 중기부(3회)
- ③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전 과정 밀착 지원
: 서류작성 지원 5회, 샌드박스 업무담당자와 업무연락 및 협업 10회
- ④ 과제의 보완 30회
- ⑤ 기업소통 123회(핸드폰 67회, 메일 28회, 행정전화 13회, 메시지 15일)
- ⑥ 국무조정실 기업 간담 등 현장 간담 20여회
- ⑦ 전문가, 실무자(중환자실 의료진, 병원 의공팀), 협회 자문 10여회

- '17. 9. 30.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1차 건의)
- '18. 3. 20. 행안부 건의 「지역 혁신성장 테마과제」 (2차 건의)
- '18. 3. 22. 행안부 건의 「찾아가는 네거티브 도입 컨설팅」 (3차 건의)
- '18. 4. 27. 행안부 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4차 건의)
- '18. 5. 8. 「국무조정실 · 경기도 · 안양시 기업간담회」추진 (5차 건의)
※ 경기도가 안건 상정 추진, 국조실 김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주재
- '18. 5. 21.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보완 후 재건의 (6차 건의)
- '18. 6. 28. 국조실(박광훈 사무관) 유선 건의 (7차 건의)

〈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주)메인텍의 추가건의 접수에 따른 기존 「대응논리 변경」 재건의

⇒ 품목신설 행정예고가 지연되고, 의견청취 기간도 60일로 연장(통상 20일)됨에 따라 '품목 신설 전' 별도 혁신성 평가에 따른 예비급여 책정 건의

- '18. 7. 13. 국조실 건의 「투자대기 기업 규제개선 건의」 (8차 건의)
- '18. 12. 24.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 급여 시행(규제의 개선), but 추가 규제 발생
- '19. 1. 30. 산업부 주관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참가, 전문가 자문
- '19. 2. 8.~ 10. 규제 샌드박스 서류 작성 지원(5차례) 및 협조 (10차례)
- '19. 2. 28. (주)메인텍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완료 (9차 건의)
- '19. 3. 4. 행안부에 추가 규제 개선 건의 「테마규제 혁신과제」 (10차 건의)
- '19. 3. 21.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11차 건의) 및 국조실에 경위 알림



‘18. 3. 기업 현장간담
(안양시 규제개혁팀)



‘18. 5. 국무조정실 기업 간담
(국조실, 경기도, 안양시, 기업)



‘19. 1. 기업 현장간담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지원)

개선효과



- 국내 원천기술의 세계화로 혁신성장 ⇒ 국내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모범사례
 - 2019년 해외시장 규모 13조원, 국내시장 규모 2,500억원 독점 진출
- 기대 매출액 (2018년 30억원) 2019년 300억원, 2025년 3조원
- 기대 투자금액 : 1천억원, 기대 일자리창출 : 3년간 1,000명
- 약액 원액의 정밀한(세계 최고) 주입 실현으로 영유아 · 중환자 · 암환자 등 치료 극대화 ICT 융합 의료기기의 기반 마련
- 기존 제품으로 인한 연 6만여 건의 치명적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 비용효과성 극대화 및 의료진 업무부담 혁신적 완화
 - 폐기약물(연간 수백억~수조원 추정), 중화 · 희석용 약물 절감
 - 여러 펌프를 교차사용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하나의 펌프로 대체 가능
 - 사용의 안전성 및 편리성
- 원천기술 피보팅을 통한 휴대용 수혈 · feeding 펌프, 인슐린 펌프, 휴대용 혈액투석기 개발 가능성으로 또 다른 혁신 성장의 마중물

“규제에 절망… 차라리 해외로 가려 했었죠”

첨단 의료기기 2년간 1대도 못 판 ‘메인텍’… 이젠 “500명 뽑을 것”

“두 달 전만 해도 기기를 갖고 해외로 떠나려 했습니디. 지난 2년간 규제에 막혀 아무것도 못 했지만 앞으로 회사를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의료 기기 회사로 키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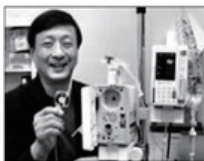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의료 기기를 만들고도 규제에 막혀 지난 2년간 단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한 중소 의료 기기 제조업체 메인텍.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메인텍이 만든 의약품 주입 펌프 ‘메니퓨전’을 기존 펌프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별도 보험 수가를 책정했다. 700원대 기존 수가는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개당 2만5000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오는 10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 메인텍 본사에서 만난 이삼빈(58) 대표는 “일본 올림푸는 내시경 렌즈 원천 기술 하나로 연 7조원을 번다”며 “우리 고유 기술로 연 9조원 규모 의약품 펌프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메니퓨전은 매년 전 세계에서 의료 사고 5만건을 내는 기존 의약품 주입 펌프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의약품 주입 펌프는 영·유아나 중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할 때 주로 쓰인다. 하지만 펌프에 삽입하는 주사기에 다시 약물을 보충하거나 주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주사용 약물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알아난 외부 감염이 원인이었다. 이 대표는 유행이 적은 주사기 대신 대용량 약물 주마니를 직접 펌프에 연결하고 그 중간에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원형 실린더 카트리지를 부착한 메니퓨전을 개발했다. 카트리지가 회전하면서 약물을 빨아들이고 밀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식이다. 그는 “약품 주입 오차율을 기존 ±20%에서 ±2%까지 줄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가천의대강남병원 등의 임상 시험 결과, 기존 펌프보다 약물 주입량이 정확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하지만 2016년 식약처는 핵심 기술인 카트리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판



이삼빈 메인텍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 펌프 ‘메니퓨전’ 앞에서 웃고 있다. 이 대표가 들고 있는 실린더 카트리지(왼쪽 부분)가 펌프 오작동을 막는 핵심 기술이다.

신기술 적용한 의약품 주입 펌프 수출 계약만 1000억원 달했지만 국내 허가 늦어지며 파산 위기에 “이젠 9조원 세계 시장 도전할 것”

때 허가를 내렸다. 메인텍의 카트리지는 기존 의료 기기 품목에 아예 없었던 기기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내 자금난에 빠졌다. 메니퓨전 개발비로만 40억원을 썼는데, 링거용 수액 조절기 수출로 연간 3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는 버티기 힘들었다. 세간의 기대와 달리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자 수출 계약을 타진

했던 해외 바이어들도 요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10억원 대출도 올해 만기가 돌아왔다. 이 대표는 “대출을 돌려받고 아들과 딸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며 버텼다”며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지만 다 부질없이 특허를 들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승인으로 연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이란·인도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이 1000여원에 달하지만 국내 허가가 늦어지면서 실제 수출은 지지부진했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향후 3년간 2000여원을 투자해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퍼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스마트폰·반도체 분야 최고가 됐지만 원천 기술 없이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없다”며 “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의료 기기도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벤처들의 면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행태 기자

07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솔루션 공급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 진입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기준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031-8045-2211

개선배경



- '18. 3.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과제 발굴. (주)울랄라랩은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IoT, Cloud 기술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정부과제로 개발하고 아틀라스스코프, 알리바바 등 20여개 해외 우수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정작 국내에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될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막혀있었음.
 - 풀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계약하는 수요기업에게 정부가 공급액의 50%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국내 판로 사실상 제한됨

※ 관련규정

- 스마트공장 추진단 공고 제 2018-05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솔루션 및 설비·자동화 공급기업 풀(Pool) 모집 공고

개선내용



- 신기술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및 스타트업 국내 시장 진입 규제 개선

2018년 3월(건의 당시)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2018년 말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2019년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 요건 : 구솔루션 열거(신기술 풀 등록신청 불가) - 엄격한 인적요건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요구 - 사업실적 요건 공급실적 1건 이상 유지보수 완료 실적 1건 이상 (유지보수기간 1년 이상) - 재무제표 제출 요구 신기술은 반드시 구솔루션과 연계 통해서만 사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 요건 완화 (신기술 풀 등록신청 가능) - 과기부 NET 인증 기업 인적요건, 사업실적 요건 면제 - 재무제표 제출 면제 - 신기술 독자적으로 사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풀의 등록요건 없어짐 -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으로 신청만 하면 수요 기업이 공급액의 50%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음

개선내용



〈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

- ① '18. 3.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최초 과제 발굴
- ② 중앙부처 건의 5회 : 행안부(2), 중기부(2), 국조실(1)
- ③ 기업, 전문가, 중앙부처 등 현장 간담 4회
- ④ 건의 과제의 보완 5회
- ⑤ 규제 개선 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 추가 규제 발굴 해소

- '18. 3.16. 기업 현장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서 과제 발굴
- '18. 3.20. 행안부 건의 「지역 혁신성장 테마과제」 (1차 건의)

〈 건의내용 〉

1.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구기술 열거방식의 등록 요건을 신기술을 예시로 한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수용)
2. 정부가 인증하거나 R&D 실적 좋은 기업의 인력요건, 사업실적 요건 완화 및
재무재표 제출 면제 (일부 수용)
3. 구기술에 연계(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하청)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규정을
개선하여 신기술 단독으로 사업 가능하도록 개선 (수용)

- '18. 3. 22. 행안부 「찾아가는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컨설팅」 (2차 건의)
- '18. 4. 14. [중기부의 행태개선으로 기업 규제개선]
 - 울랄라랩 공급기업 풀에 등록
 - 신규투자 유치 20억
 - 전남 에이비메디컬 의료용품 제조공장 현장 자동화
 - ⇒ IoT(新기술)가 主, Mes(舊기술)가 従이 된 국내 첫 번째 사례
- '18. 4. 27. 행안부 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3차 건의)
- '18. 5. 25. 울랄라랩 대표 간담, 사후관리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
- '18. 5. 28. 행안부 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추가 · 보완」 (4차 건의)
 -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담당 사무관 업무연락

〈 추가 건의내용 〉

1. 과기부 NET인증, KSTART300 기업의 인력요건, 사업실적요건 면제 (일부 수용)
2. 여전히 신기술을 구기술에 연계해 사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지양 (수용)

- '18. 5.31.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5차 건의)
- '18. 7.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의견 회신.
- '18. 10. 24. 사후관리를 위한 울랄라랩 대표 규제개선 만족도 조사 실시
 - ⇒ 울랄라랩 대표 설문지 응답 中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 진행에 만족」



기업 신기술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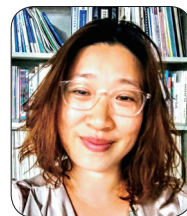
‘18. 3. 기업 현장간담
(안양시 규제개혁팀)

개선효과



- 국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기업 증가(산업군의 확대)
200개(2018년) ⇒ 1,800개(2019년) : 9배 상승
- (주)울랄라랩 연매출 증가 : 2018년 대비 10배 증가
 - 기대매출액 : 연 400억/연 이상
 - 일자리창출 : 400명/연, 투자금액 : 400억/연
- VR, 로봇,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공급 기업 및 스타트업 국내 시장 진출로 관련 산업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규제혁신... 그 끝없는 좌절과 도전!



✎ 작성자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031-8045-2211

모두가 불가능할거라 말했던 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조윤주씨는 그저 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겠지만, 엄청난 일을 내고 말았다.”
기업대표께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3년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다섯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 세계 유일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가 개발 11년 만에 드디어 13조 세계시장에 독점 진입하고
혁신성장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 최고의 약물주입 정확도와 감염차단 등으로 중환자·암환자·영유아환자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기존 제품의 치명적 부작용으로 인한 연 6만 여건의
의료사고도 예방하여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신기술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길은 두렵고 힘이 들었으며 수많은
위기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위법령에 산재한 의료 규제 확인의 난해함, 신기술 고도의
전문성, 기업우호적 전문가 발굴의 어려움, 정량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기술의 혁신성 입증
및 시장·산업적 관점의 기대효과 분석, 기득권의 반발과 압력,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기업의 돌발 위기 상황 발생, 추가 규제의 발생 등으로 쉬운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 밤새 연찬하고, 수시로 현장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병원 현장 및 기술진을 방문했으며, 설득력 있는 건의서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및 규제혁신 협업 중앙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했고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10차례 넘게 다채널로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잠 못드는 날도 많았고 주저앉고 싶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고된 여정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안건 상정과 규제혁신기획관 기업 간담 추진을 통해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의 품목의 신설과 예비급여의 책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준 경기도와
규제혁신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안양시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과감하고 시기적절한 적극행정이 없었더라면 규제의 개선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의 혁신사례를 용기 있게 추진해 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행정에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중점 시책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의 밀착지원을 통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트랙에 진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 전국 최초 지자체이기도 하며, 다양한 신산업 현장경험과 많은 실패경험을 통해 확립된 신산업 규제혁신 노하우로 실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자율주행 시 실험용 차량의 자기인증 면제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고도화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여 생명 살리는 신기술인 스마트AED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이끌어낸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폴 규제를 개선하여 신기술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스타트업도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관련 산업군을 10배 성장시키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은 시장 독점에 따른 혁신성장 효과로 그 경제적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더욱 더 추진과정 상의 어려움과 특별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민이 나의 적극행정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갖게 된다면, 생명과 건강·더 나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끝없는 실패와 좌절의 히스토리를 극복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해볼 것을 다짐해봅니다.

끝으로 지난 3년 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야간·주말을 불사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부족한 저를 말없이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지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
편집제작	규제개혁담당관
